



기준금리 年3% 동결 고환율에 '신중 모드'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정치적 불확실성 속 환율 주시 물가 안정세에도 인하 속도조절

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은 미지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언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

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00%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 3.50%로 동결한 뒤 10월 3.25%, 11월 3.00%로 각각 0.25%포인트(p) 인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환율에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얼마나 해소될지 지켜보고 인하 속도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 1402.9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기준 1460.2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달 새 57.3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월에는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원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돼 경상화되는 것과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정부 정책 영향까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물가 수준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8월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

(2.0%)를 밀돌고 있다.

한은은 올해 연 평균 물가수준을 1.9%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이 1430원대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는 0.05%p 올라 1.95%가 되고, 1470원대로 오르면 물가가 0.15%p 올라 2.05%가 된다.

이 총재는 “이미 물가는 목표치 (2%)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을 검토해 (인하)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리 동결로 내수(소비+투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줄었던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까지는 경제가 악화된 만큼 소비가 둔화되지 않았는데, 계업사태 이후 1월 초까지 신용카드 사용량 등 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제성장률도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의 결문에서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치 (2.2%·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尹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스

친환경차 바람에 작년 車 수출 '역대 2위'

연수출액 2년 연속 700억弗 돌파
하이브리드차 높은 성장세 영향

자동차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709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대비 45.8% 급성장한 113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작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3% 감소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수출 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만2000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둔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다”며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며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한 413만대(전년동기 대비 -2.7%)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8.7만대), 트랙

스(28.5만대), 코나(24.9만대), 스포티지(21.1만대), 트레일블레이저(20.8만대) 순이다. 생산 차량의 67%(278만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작년 국내 판매는 163만대(국산 134만대, 수입 28만대)로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친환경차 중 76%, 전체 국내 판매 차량 중 30%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이어나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영장 청구 시점 미뤄져

‘공수처 체포영장 위법’ 고수 48시간 체포 시한 일시 정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렸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체

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尹측 “질서 회복 필요 없었는데 탄핵… 정권 탈취 목적”
▲국회측 “尹은 헌법의 적… 신속히 만장일치 파면해달라”

/사진 뉴시스

▲野 “명태균, 유튜버 부탁으로 여의도연구원 인사 청탁”
▲계엄날 경찰 “누구 체포?”… 방첩사 “이재명·한동훈”

▲ 정부 “北비핵화 일치된 목표… 美신행정부 정책검토 과정서 공조”
▲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尹대통령 대리인단 합류